
수입자유화와 농업정책의 방향

〈제 4 주제〉

수입자유화와 한국농업 구조 개선

朱 宗 桓

(東國大農大教授, 農業經濟學會長)

수입자유화는 한국경제정책의 당위적(當爲的) 과제로 제기되어 관계당국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수입자유화정책은 그 이론적 근거를 국제경제학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비교우위론에 두고 있다. 그런데 비교우위론은 창시자인 D. Ricardo의 경우에 있어서 몇가지 엄밀한 이론적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①완전경쟁 ②기술조건 불변 ③완전고용 ④국제수지의 균형 ⑤ 자원 이동비용의 무시 등이 그것이다. 또한 비교우위론은 A. Smith의 절대우위론과는 다른 이론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은 우리경제 특히 농업에서는 갖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78년 비교우위론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 아래 농수산물수입을 일시에 증대시킨 결과 국내 농축산업이 꺾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Joan Robinson 여사가 지적한 바는 매우 인상적이다.

「현실과는 아무상관도 없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입각하여 이론을 전개하여 결론을 구하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런 일들을 모두 완전한 순환론법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진행시키는 경우이다. 이러한 하나의 예로서는 각국의 수입과 수출이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세계에 있어서의 국제무역 문제를 연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위험천만한 일은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결론을 논리적으로 유도하고 그러한 결론을 사용하여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습관이 있다는 점이다.」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자유화 정책에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국내산업보호정책만이 옳다고 보는 것도 올바른 견해라고 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현실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적절히 절충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국제경제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흥정 아래서의 자유무역주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함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의 증대는 그 부문에서 실업의 증대(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고 수출의 증대는 실업의 감소(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대상품목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수입자유화품목 선정은 비교적 경쟁력이 강한 독과점품목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각품목별로 그 생산에 이용되는 각종 생산요소들이 수입의 개방으로 말미암아 유희화될 때, 이 생산요소들을 어떤 정도의 기간안에 어느 정도 용이하게 다른 생산분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나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업은 공업에 비해 수입증대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네째 국내자원비용(DRC)을 계산하여 수입정책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하나의 참고사항은 될지언정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 D.R.C의 계산을 위해서는 잠재가격을 정하는데 난점이 있을뿐 아니라 완전경쟁시장과 완전고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다섯째 수입자유화정책에 있어서 각별히 고려되어야 할 점은 국제 독점자본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80년 쌀 흉작 때 국제 미곡독점업체들의 횡포는 기억에 새롭다.

여섯째 수입자유화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에 따른 산업조정 진행속도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일곱째 오늘날 각국은 협상 아래서의 무역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두나라간 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우리의 수출품을 사가는 만큼 수입을 확대하는 식의 선택적 확대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농업은 인구 30% 이상이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으로 수입자유화에 앞서 생산성제고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생산비가 비싼 농산물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거꾸로 파악한 견해이다.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몇개의 선행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우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도록 토지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또 토지의 임대차를 허용하면서 투기방지책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농업기술개발과 토지기반정비 및 농업기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환경조성이다. 흔히 농업이 비교열위산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80년대후반 다수확신품종의 보급에 의한 쌀의 증산은 농업이 결코 비교열위산업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로 안정적이고 적정수준인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어 인력자본의 중요성을 인식, 농어민의 유능한 후계자가 양성되어야 한다. <이상 심포지움 발표 내용 게재 끝>

- 질서는 징검다리 건너뛰면 사고난다
- 어떠랴 한번쯤 그게 바로 부패심리
- 보란듯이 벌인잔치 알고보니 빚투성이